



지방자치 정책 Brief

2022. 12.
NO.155

지방자치단체 증거기반정책 정착을 위한 방안

박현욱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증거기반정책의 필요성

- 증거기반정책(EBP: Evidence-Based Policymaking)은 디지털 기반에서 과학적으로 생산된 데이터(정부통계, 빅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기반의 정책을 추진코자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의 실시 등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의 본격적인 적용을 모색 중임

증거기반정책 추진체계

- 증거기반정책 추진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로직 모델, PDCA 정책평가 사이클에 의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최적의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함
- 증거기반정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는 논리모델에 기반함

증거기반정책 정착 방안

- (기술적 차원) 정책 및 사업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제도적 차원) 정책과정 단계별 계획 간 연계체계 구조화를 시행하고, 증거기반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한 본청과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함
- (조직적 차원) EBP의 활성화에 적합한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 유관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과 위원회 등을 활용한 전문성을 보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관리 차원) 공무원들의 빅데이터·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민간의 빅데이터·통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01

증거기반정책의 개요



증거기반정책의 개념 및 정의

-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은 정책수립(입안)시 정책의 투명성과 과학성을 위해 근거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

증거기반 정책의 정의

저자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정의
Davies (1999)	• 연구 개발된 가장 최상의 증거를 정책개발과 정책집행의 핵심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프로그램, 정부사업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돕는 장치나 접근방법론
Sutcliffe & Court (2005)	•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의 종국적인 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책과정에 정보를 풍부하게 만드는 담론과 방법론의 조합. 보다 합리적이고 활동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법을 의미함
O'Dwyer (2004)	• 증거기반 정책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도출되며 질적으로 보장된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직관, 전통, 정치, 현존 관행과는 차별되는 정책을 의미함
La Caze (2006)	• 증거기반 정책은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다소 논쟁거리가 없는 인식론적 기준의 수용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최상의 증거가 결정을 뒷받침하도록 사용된 경우를 의미함
AU Productivity Commission (2010)	•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설계, 정책집행, 정책재정립에서 엄격하고 증명된 증거를 이용하는 과정

자료: 윤광석(2016)



증거기반정책의 대두 배경

- 정부 정책에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국가는 1990년대 영국으로 당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적 서비스의 재검토 문제 등에 적용하고자 함
- 「코크란 공동 계획」(1993년)으로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 사회정책분야 전체의 「캠벨 공동 계획」에도 적용된 것이 증거기반정책의 시작으로 되어 있음
- 이후 영국의 블레어 정권에서 증거기반정책은 정책추진의 도구로 유용성을 인정받아 증거의 생성·활용을 지원하는 제3자 기관(What Works Centre)을 설립하는 등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추진체제가 정비됨
-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에 전파되어 과학적 정책추진의 접근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음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

- 사회가 복잡·다변화되고 ICT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행태 등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환경도 변화가 발생함

- 증거기반정책은 단순히 객관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의 정책추진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기준의 하나로 증거기반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개연성이 증대됨
- 증거기반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정책결정자들은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정치적 신념이나 주관적 가치관에 의한 정책추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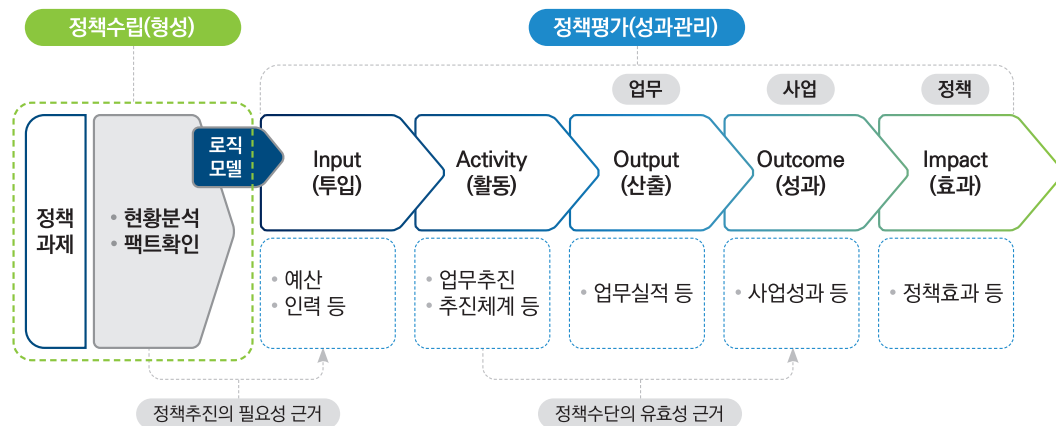
증거기반정책 추진체계 분석



증거기반정책 추진 논리 및 평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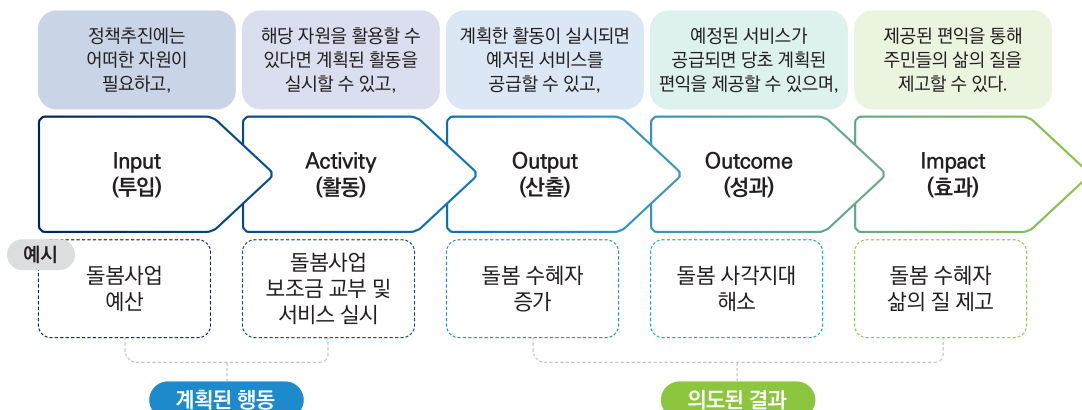
- 증거기반정책 추진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로직 모델, PDCA 정책평가 사이클에 의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최적의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함
- 증거기반정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는 논리모델에 기반함

EBP추진 논리



자료: 이병기·박현욱(2022)

로직모델을 적용한 성과평가 구조(예)



자료: 이병기·박현욱(2022)

03

증거기반정책 정착 방안



양질의 행정 빅데이터 구축

- 증거기반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임
- 단순히 다량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정책 및 사업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빅데이터 사용을 통한 효과적인 증거기반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 교통, 의료, 복지, 환경, 도시와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제도 정비

- 정책과정 단계별 계획 간 연계체계 구조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증거기반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한 본청과 의회와의 협력 필요



증거기반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 증거기반정책의 활성화에 적합한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 유관 부서 간 협조체계의 구축과 위원회 등을 활용한 전문성을 보강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거기반정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데이터, 정보정책과 시스템 운영, 통계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증거기반정책 관리가 현실적인 것임



데이터 활용 인재 확보

- 공무원들의 데이터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실무에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지역 대학·연구기관에 위탁을 통해 데이터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내 데이터 인재 육성과 더불어 민간의 통계 및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강정석(2015) 정부업무평가에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2019)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사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광석(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병기·김건위(2020) 경상남도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박현욱(2022)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용수 외(2021)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과기정통부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문의

박현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조직진단분석센터 부연구위원(033-769-9843, bakhu@krila.re.kr)

지난호
보기